



해양경찰청

## 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5. 30.(월) 10:00	배포 일시	2022. 5. 30.(월) 10:00
담당 부서	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	책임자	과 장 김태환 (032-835-2051)
		담당자	계 장 김원태 (032-835-2151) (010-2586-0225)

### 「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」 제정,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

- '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, 수상레저 활성화' 에 대처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기대 -

해양경찰청(청장 정봉훈)은 현행 「수상레저안전법」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전부개정 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·사업·안전관리·등록·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고,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 이 있었음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상레저 분야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.

이를 고려하여, 2020년 12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(국민의힘, 경북 영천시청도군) 등이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과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, 이번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이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되고,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새롭게 제정된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△지자체 소관 레저기구관리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·감독 근거 신설 △레저기구의 무선설비,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·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.

전부개정된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서는 △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(5년 단위) 수립 △조종면허증의 대여·알선행위 금지 △국민편의를 위한 보험 등 전산망 구축·운영 등이 신설되었다.

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“이번 법률 제·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하며, “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, 제도의 정비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: 법률안 주요 신설내용 1부. 끝.

## □ 법률안 주요 신설내용

구 분	조 문	주요 내용
수상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(제정)	제5조	각 지자체 소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무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, 효율적 등록제도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지도·감독 근거 마련
	제16조 ~ 제17조	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안전검사 합격 시 안전검사필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
	제21조 ~ 제24조	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·설비, 무선설비, 위치발신장치 의무화 등 안전검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	제31조	벌칙 부과 시 행위자 외 주의의무 위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양벌규정 적용
수상레저 안전법 (전부개정)	제4조	중장기적 관점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「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(5년 단위)」 수립 의무화
	제22조	기상악화 시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(기존에는 시행령 별표에 규정)을 법률로 상향 규정
	제36조	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	제52조	보험가입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보험가입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·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
	제63조	벌칙 부과 시 행위자 외 주의의무 위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양벌규정 적용

# 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‘수상레저안전법’ 개편 ”

기존 법률은 면허, 교육, 사업, 안전관리, 등록 검사 등 이질적인 내용이  
한개의 법률에 혼재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

###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

-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·감독 근거마련
-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
- 무선설비, 위치발신장치등 설치 의무화
-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벌규정 도입

### 수상레저안전법 전면 개정

- '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' 의무화
-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
- 조종면허증의 대여, 알선 행위 금지
- 수상레저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.운영

